

##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향후 예상태도

전 성 훈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지난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격침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5월 20일 발표되었다. 사건발생 직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는 선부른 예단을 삼간 채 일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내기로 하고 조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46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다. 22명의 군·정부 관련 전문가, 3명의 국회추천 민간전문가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의 사고조사 전문가 24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합조단은 각종 증거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국제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원인은 예상대로 북한에 의한 군사적인 도발이었다. 합조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잠수정에서 발사된 폭약중량 250kg 정도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음파·지진파 분석, 화학성분 분석 기법 등 동원가능한 모든 첨단과학 수단을 사용해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가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로서, 북한제 어뢰의 스크루우 파편을 수심 47m의 해저에서 건져 올려 공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조사결과 발표가 시작된 지 30분 만에 천안함 침몰은 남한이 날조한 조작극이라며 남한이 보복할 경우 전면전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아마도 북한 정권은 남한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남한정부에게 정치·군사적, 심리적 타격만 입히고, 자신들은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북한의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번 사건조사를 위해 남한이 동원한 각종 첨단기법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낮아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하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핵문제가 시작된 지난 1992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실시한 재처리 회수와 추출된 플루토늄 양을 거짓으로 보고했었다. 북한이 당시 진행되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단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소동을 벌인 것도 바로 IAEA가 거짓보고 사실을 밝혀내어 궁지에 몰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보인 공격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IAEA는 당시로선 최첨단의 샘플링 기법을 사용해서 북한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했

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대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IAEA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도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조사결과 발표장에는 다국적 조사팀의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고, 미국측 대표단장인 해군 준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견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다국적 조사팀 전원이 동의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 북한의 입장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한은 이 사건이 남한 정부에 의한 모략극이자 날조극이며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물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처럼 범인이 체포된 사건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이고 보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순순히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반응은 4월 17일 군사논평원의 글이란 형식으로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 북한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관련되었다는 설의 진상을 폭로한다면서 남한의 국내정치와 결부시켰다. 즉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과 연계시켜서 안보문제를 부각시킨 다음 당면한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면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서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대북제재 분위기를 지속시켜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5월 17일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대회에 참석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남한이 천안함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조단의 조사 발표 하루를 앞두고 조평통은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고발장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사건은 “일대 모략소동”이며 지방자치선거를 무난히 넘겨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고 “대결과 전쟁책동의 최고절정”이라고 규정했다.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중이던 5월 20일 오전 10시 반, 북한의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1.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연계되어 있다는 남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할 것이며, 남한은 이 사건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물증을 검열단에게 제시해야 함.
2. 북한은 응징과 보복,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제제에 대해서 즉시 전면전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담할 것임.
3. 서해를 포함해서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해, 영공, 영토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도 남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한계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임.

국방위원회 성명 하루 뒤인 5월 21일 조평통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입장을 천명했다.

1.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
2. 남한이 천안함 침몰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남북관계 전면폐쇄, 남북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공격행위’나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니 하면서 북한을 고립·압살시키려는 적대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미국의 승인과 비호 및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정보를 사용한 전력을 제기하면서 미국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이틀 뒤인 5월 22일 10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은 정전협정 위반사건으로서 군사정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5월 21일 보낸 바 있다. 남한의 회답에 대해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이 5월 22일 북한의 검열단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 통지문에서 북한은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남한에 의해서 남북간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명기구를 끌어들이 명분이 없으며, 불가침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 제2장 8조에 따라 남한이 국방위원회의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위원회는 5·24 천안함 담화를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서투른 연극”이라고 규정하고 검열단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외무성대변인도 뉴욕에서 진행중인 제8차 NPT 평가회의를 거론하며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국방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한 공개경고장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1. 남한군 현병초소에 건물벽에 새겨놓은 대북 심리전 구호를 즉각 제거하고 가담자를 엄벌에 처할 것.
2. 심리전 구호를 그대로 두고 확성기와 같은 수단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임.
3. 남한이 북한의 대응에 대해 도전한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를 것임.

## 북한의 향후 예상태도

북한 당국은 소형 잠수정에 의한 기습공격이 완전범죄는 아니더라도 확증을 찾지 못하는 영구미제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심증은 갖지만 물증을 찾지 못해서 곤혹스러워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안보무능으로 비판받고 진보진영으로부터는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비난받는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지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 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 발표로 이런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상대를 속이는 기만전술이 실패했을 때 북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을 택하곤 했다. 1990년대 초 IAEA에 대한 거짓보고가 사실로 밝혀지자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NPT 탈퇴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북한은 수세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치고나가는 전략을 쓰



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공세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침몰은 북한과는 무관하다는 기본 전제하에, 북한이 취하는 모든 조치의 성격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대응으로 규정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공세적 대남전략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서 남한사회에 정치, 경제, 심리적 타격을 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북한 함정의 NLL 침범은 계속 될 것이며 남북간 해상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한의 대응에 대한 반격으로 우리 함정에 대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경제적 이득과 공단폐쇄에 따른 대내외적 부담을 고려해서 쉽게 폐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분간 남측 근로자의 인질화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 남한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공단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의 대내전략도 조정될 것이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열면서 구체화될 권력승계 작업도 군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사실상 포기하고 경제적 손실의 돌파구를 군사부문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즉 남한과의 대결각을 세워 준전시상태를 조성하고 전쟁분위기 속에서 권력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열악한 경제와 3대 세습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전쟁위협을 조성해서 극복하려는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북한 무관설’과 ‘자위적 대응’이라는 두 축을 토대로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제3차 핵실험이다. 5월 말 제8차 NPT 평가회의가 종료된 이후 금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과학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5월 12일자 로동신문 보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융합이란 핵분열을 원리로 하는 원자탄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위력이 강한 수소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북한이 핵융합 기술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융합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면서 핵 억지력을 부풀리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실시된 핵실험은 각각 1킬로톤과 2킬로톤 정도의 소규모 핵실험이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소규모 핵실험을 했겠지만,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의 핵능력이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자 파괴력을 대폭 늘린 추가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핵융합 성공 보도는 천안함 사태로 조성된 긴장 분위기를 역으로 이용해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이자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